

# ‘산재와의 전쟁’ 경찰, 전담 수사팀 신설... 광주·전남은?

‘산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경찰이 산업재해 관련 전담 수사팀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은 증원 인력 없이 기존 형사기동대 안전사고 수사팀을 재편, 팀을 계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국 시·도 지방청 산재 전담 수사팀 인력 42명을 보강하는 직제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국 시·도 지방청 형사기동대에 있던 기존 안전사고 수사팀 인력 59명을 산재 수사팀으로 편성하고 추가로 42명을 투입해 101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 신설에 나선다.

보강되는 인력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되는 산재 수사협력관 7명도 포함됐다. 중대재해 사건의 현장 감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산재 전담 과학수사팀도 신설한다.

현재 전남경찰청은 형사기동대 1계와 2계에 각각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된 안전사고 수사팀을 운영 중이다. 1계는 서부권, 2계는 동부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산재 전담 수사팀 신설에 따라 전남청은 기존 1계와 2계에 나누어 배치된 안전사고 수사팀을 통합, 계 단위로 확대·개편이 점쳐진다.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3명 승진 전남순천레미콘공장 직사각형사고와 관련해 업체입수수색과 함께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사

## 전국 인력 42명 보강... 광주·전남 증원 없어 전남청 안전수사팀 계 단위 확대·개편될 듯 책임자 경감→경정, 광주도 분리·확대 가능성

책임자도 경감(팀장)이 아닌 경정(계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할 구역이 넓은 전남의 지역성 특성에 따라 새로 생길 산재 전담 수사팀은 현재 안전사고 수사팀과 동일하게 팀을 나

뉘 동부권과 서부권에 배치될 수 있다.

광주청은 형사기동대 1계에 7명으로 꾸려진 안전사고 수사팀이 산재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광주청 역시 계 단위로 분리·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전담 수사팀 인력을 보강하고 노동부 산재 수사협력관을 배치하지만 광주와 전남청은 별도의 인력 증원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 수도권 지방청 위주로 인력이 보강, 수사협력관도 수도권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와 전남경찰 관계자는 “산재 전담 수사팀 신설과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정기 인사가 이후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 광주 정책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내년부터 전국 시행 유아기 자녀까지 확대 운영... 급여 지원

광주시가 직장인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이재명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인 ‘육아 10시 출근제’에 반영돼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광주시가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돌봄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정책으로 광주시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장에 지원하고 있다. 첫 시행 당시 87개 사업장 100명의 근로자에게 66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 101개 사업장·126명·8625만원, 2024년 174개 사업장·306명·2억2440만원, 올해 500명·4억원으로 늘었다.

광주에서 시작된 정책은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모델로 자리잡았다.

또 정부는 광주가 시행하고 있는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책을 문의했으며 지난달 29일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

고용노동부는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 학부모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려 ‘육아 10시 출근제’로 발전시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에서 시작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전국으로 확대됐다”며 “유아·초등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며 양육 부담을 어느정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광훈 기자

법원이 90대 낙상 환자에 대해 요양보호사 실수로 응급 처치 등을 소홀히 한 요양원에 대한 지자체 개선명령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경중 부장판사)는 요양원 운영 A사회복지법인이 전남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개선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포시는 A복지법인에 한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5월 A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는 90대 환자 B씨가 다른 환자와 승강기를 하다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요양보호사는 걷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자 B씨를 침대에 눕히고 수시로 상태를 파악했다.

## 法 “보호사 오판에 ‘방임 학대’, 요양원 개선명령 과도”

### “위법성 대비 재량 남용... 동일 내용 행정지도로 충분”

이후 요양원 측 후속 대처로 B씨가 오른쪽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정밀검사로 확인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퇴원까지 했으나, 폐렴 등으로 다시 입원한 뒤 건강 악화도 겪었다.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비의료인 요양보호사가 자체 판단에 따라 B씨에게 곧바로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방임’ 학대 사례로 판정했다.

목포시는 이에 해당 요양원을 운영하는 A법인에 ‘운영 규정에 학대 유형·해결 내용 명문화’, ‘시설 자체 응급상황 대처 업

무 매뉴얼 수립 ‘노인학대 인식 개선 특별교육’ 등이 담긴 개선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목포시의 개선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A법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는 사고 직후 B씨를 1시간 간격으로 4차례 살피고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다. 병원 사무국장 은 출근 직후 보고 받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 요양원 측은 의료적 검사나 처치를 받게 하지 않아 의무를 소홀히 했으나 방임은 불과 6시간이고 단순 방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이 “단지 요양보호사가 B씨의 외관이나 반응만으로 건강 상태를 선별리 판단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과정보다 내용에 비해 위법 정도가 낮다. 사고와 관련된 행위와 폐렴 등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요양원의 노인학대 방지 노력과 기관 평가 결과 등도 고려했다.

특히 “개선 명령이기는 하나, 2차 위반은 ‘시설장 교체’, 3차 위반은 ‘시설 폐쇄’라는 단계적 조치가 가해지는 제재 처분이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최하등급으로 떨어지면 경영상 작지 않은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 만으로도 업무 개선 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전민규 기자

## ‘직고용 전환 전 우리사주 배정’ 손배소, 금호타이어 승소

금호타이어가 파견 협력업체 출신 근로자들이 직접고용 전환에 앞서 기존 직원들이 배정받은 ‘우리 사주’(근로자 취득 자사주)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파견업체 출신 금호타이어 직접고용 노동자 241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원고들은 당초 협력업체 소속으로 금호타이어에서 파견 근로를 하다, 2022년 5월 손해배상 소송 2심 화해 중결 합의를 통해 직접고용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

다. 이에 원고들은 ‘사측은 기존 근로자들의 자사주 취득 시점 이전부터 있었던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측의 불법행위로 취득하지 못한 1830주의 시세에 맞춰 1명당 1330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이반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접고용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파견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사용 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 해당한다. ‘우리 사주’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오히려 ‘우리 사주’는 사측이 경영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외부자본 유치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이나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배정한 것에 불과하다. 임금이 아니라, 일회적 또는 시혜적으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사측에 직접 우리 사주 배정을 요구하거나 가액 상당의 금전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승원 기자

광주·전남지역에서 올해 7개월 동안 노소 사기가 총 321건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소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총 2892건의 노소 사기가 접수됐다.

## 광주·전남 ‘노소사기’, 7개월 동안 321건 접수

이중 광주·전남지역에서는 7개월 동안 300여건이 넘는 노소사기가 접수됐다.

세부적으로 광주지역의 경우 189건이 접수, 피해액이 30억원에 달했다. 전남지역은 132건이 신고됐으며 18억원이 피해

액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노소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사기 수법이 전화나 메신저로 이뤄지고 위조 명함이나 신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박 의원은 “노소 사기는 이름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속이면서, 높은 매출을 약속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이 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지는 악질 사기”라며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경찰이 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현근 기자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